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김병로(통일연구원)

◁ 목 차 ▷

- I. 문제제기
- II.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인적 손실
- III. 인적 손실에 따른 계급정책의 질적 변화
- IV. 남북화해와 민족공동체 형성에의 시사점

I. 문제제기

전쟁은 실로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킨다. 나라를 붕괴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과거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사라지고 생성했음을 인류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전쟁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며 모든 것의 왕이다”라는 고대 역사가 헤라클리투스의 말은 전쟁이 인간사회를 변화시키는데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절실히 인식한 표현일 것이다. 국가는 전쟁을 촉발시키지만 일어난 전쟁은 국가와 사회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전쟁을 통해 사회는 재구성되며 질적인 변화를 겪는다. 이런 점에서 전쟁은 중대한 사회적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이 남북한 사회의 발전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은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주요 도시와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사망자와 부상자, 이산가족이 양산되는 엄청난 물적, 인적 손실을 입었다. 전쟁은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의 싹을 키우는 사회적 토양을 제공했고, 특히 북한에는 수령론이라는 유일지배체제를 뿌리내렸다. 전쟁의 상처로 생성된 적대적 이데올로기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대결정책으로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을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적대의식과 감정은 통일 과정에서 민족공동체 형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끼친 심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실태에 대해 지금까지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남한에서는 남쪽의 피해만을 부각시켰고 그 피해를 입힌 북한 쪽의 사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터부시되어 왔다. 북한의 피해를 언급하는 것이 마치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 때문에 북한의 한국전쟁 피해를 연구하는 일은 큰 부담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한국전쟁과 관련한 북한의 피해상에 대해 눈을 돌리지 못했다.

탈냉전기에 들어 북한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한국전쟁의 피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꽤 다행이다. 김귀옥박사와 강정구교수의 “한국전쟁과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은 북한의 한국전쟁 피해를 분석하고 그 경험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분석했다.¹⁾ 이 연구들은 전쟁의 체험을 통해 자립, 자주, 자위의 국가정책과 주체사상, 반미주의가 어떻게 북한에 형성되었는지를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으로 전쟁이 초래한 양적 피해, 특히 인적 손실에 대한 논의는 결여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결과가 전쟁이후 북한사회의 성격을 규정할 만큼 심대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전쟁의 물적 피해나 질적 체험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기저에 전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져 본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조선전사」 25권, 26권, 27권 세 편의 책을 통해 한국전쟁의 역사를 다루면서도 얼마나 많은

1) 김귀옥, “한국전쟁과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1992년 여름 사회학회 발표논문); 강정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서울: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1991), 제6장.

북한사람들이 인적 손실을 입었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전쟁의 잔인함을 폭로하기 위해 17만에 달하는 양민학살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설명하지만 거기에서도 북한 전체의 인명피해에 대한 언급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전쟁으로 입은 북한의 인적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아마도 한국전쟁의 승리를 주장하는 북한으로서는 만약 북쪽의 인명피해가 컸다고 할 경우 전승신화의 정당성에 상당한 훼손이 올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야기한 동인이 한국전쟁으로 입은 인적 손실의 방대한 규모와 그 성격에 있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전쟁 이후의 사회구조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규모와 그 특성에 대해 규명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전쟁이 북한의 인구구성 변화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한 계급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사회구조 형성에 미친 전쟁의 사회적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일차적인 초점은 한국전쟁으로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인적 손실을 입었는가를 밝히는데 모아질 것이다. 주민들의 전쟁체험과 의식상태는 구성원들의 상실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사회정책 및 계급정책도 인적 구성과 가족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남북한의 화해와 민족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이러한 북한의 사회구조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인적 손실

한국전쟁 기간 중 얼마나 많은 북한사람들이 사망했을까?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 본 절의 목적이다. 왜냐하면 인구의 대량손실은 많은 사회적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회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료가 불충분하여 정확한 해답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시된 자료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정부의 자료는 북한의 인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군의 피해를 80만명으로 보고 있다.²⁾ 이러한 추정엔 전사자와 부상자, 실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민간인 피해도 제외하고 있다. 또 다른 자료는 북한군의 피해를 총 93만명으로 평가하는데, 이 가운데 사망자는 52만명, 부상자는 40만6천명으로 구분한다.³⁾ 이 자료에서 밝혀진 북한군 사망자 52만명 가운데는 행방불명자와 민간인 사망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행방불명자와 민간인의 피해를 포함하면 북한의 인적 손실규모는 이보다 클 것이다. 또한 중국인민군을 포함한 공산측의 병력손실을 150만~200만명으로 평가⁴⁾하기도 하며, 중국군의 피해를 90만~123만명으로 보기도 한다. 이처럼 추정치가 다양한 것은 자료부족 이외에도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없이 총체적 인명손실을 추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북한군의 인적 피해를 52만명 내지 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⁵⁾

북한군의 병력피해 이외에 민간인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정부자료는 북한 민간인의 피해규모에 대해 사망자, 부상자, 행방불명자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약 200만명으로 보고 있다.⁶⁾ 또 다른 자료는 북한민간인 피해를 150만명으로 잡고 있다.⁷⁾ 이 가운데 실제 사망자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남한의 경우 부상자는 민간인보다 군인이 많은 반면 사망자는 군인보다 민간인 쪽에서 훨씬 많이 나왔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도 군인사망자 보다는 민간인 사망자가 더 컸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군인사망자가 52만명이므로 민간인 사망자가 적어도 군인사망자보다 많다고 가정할 경우 인적손실은 100만명 이상이 될 것이다.

-
- 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下)(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p. 649.
 - 3) 유완식·김태서, 「북한30년사」(서울: 현대경제일보사, 1975), pp. 137~138;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1권(서울: 전쟁기념사업회, 1990), p. 480에서 재인용.
 -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 168.
 - 5)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1권(서울: 전쟁기념사업회, 1990), p. 481.
 - 6) 유완식·김태서, 「북한 30년사」, p. 137~138.
 - 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下), p. 663, 각주 114에서 「이북5도 30년사」(p. 79)를 재인용.

일본 동경에서 발행되는 「통일조선신문」(1970.6.27)은 한국전쟁으로 군인 61만명, 민간인 268만명 등 총 330만명의 인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하였다(〈표 1〉). 이 가운데 사망자와 실종자 등 인적 손실은 14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한다.⁸⁾ 사망자가 민간인 40만6천명, 군인 29만4천명이었고, 행방불명자는 월남자를 포함하여 민간인 68만명으로 총 138만명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인 행방불명자 가운데 상당수의 월남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남자를 제외하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140만명보다 줄어들게 된다.

〈표 1〉 한국전쟁의 인적 피해: 통일조선신문

구분	민간인		군인		기타	
	북한	남한	북한	남한	중국군	미군
사망	406,000	373,599	294,151	227,748	184,128	36,813
부상	1,594,000	225,849	225,849	717,083	715,872	114,816
행방불명	680,000	91,206	91,206	43,572	21,836	6,198
계	2,680,000	990,995	611,206	988,403	921,836	157,827

자료 : *Toitsu Chosen Shimbun*, June 27, 1970; Young Whan Kihl,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Regimes in Contest*.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4), p. 42.

북한의 인적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사람은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와 존 헬러데이(Jon Halliday)로 이들은 전쟁을 통해 민간인 200만, 군인 50만 등 최소한 250만명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이들이 주장하는 숫자가 사망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부상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사망자로 간주해야 옳을 것 같다. 만약 250만명

8) *Toitsu Chosen Shimbun*, June 27, 1970; Young Whan Kihl,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Regimes in Contest*.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4), p. 42에서 재인용.

9) Jon Halliday and Bruce Cumings, *Korea: The Unknown War* (New York: Pantheon Books, 1988), p. 202.

이 실제 사망자 혹은 실종자라면 이는 당시 북한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가 된다. 한국정부와 유엔이 평가하는 북한의 민간인 피해 200만명은 부상자를 포함하는 인적 손실을 총칭하는 것으로 실제 사망자 수치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실제 사망자가 250만명이라면 이는 북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규모일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인적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시한 자료는 전쟁자료들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쟁사료를 통해 북한의 인적 손실규모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북한의 인구 자료를 통해 북한의 인적 손실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보자.

북한 공식인구 자료는 1949년과 1953년 사이에 약 113만 1천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표 2〉). 이는 1949년 북한인구 962만명의 12%에 해당하는 숫자이다.¹⁰⁾ 한국전쟁 기간은 만 3년이지만 북한의 인구자료가 1949년말과 1953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되는 한국전쟁 기간은 1950년, 51년, 52년, 53년 4년으로 계산된다. 전쟁 전후 6개월씩 1년의 평상기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나, 전쟁전과 전쟁후의 출산율, 사망률이 상쇄되어 전쟁기간 사망자를 추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전쟁기간동안 어떠한 인구의 출생이나 이동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인구변동이 없이 1949년의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전쟁으로 인한 인적 손실은 113만 1천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실제 인적 피해는 이보다 클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전쟁 동안 북한의 인구손실은 최소한 113만명은 넘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쟁으로 인한 인적 손실 없이 북한의 인구가 1949년의 상태로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면 1953년에 얼마나 되는가? 1949년의 자연인구증가율은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 1,000명당 22.5명으로 기록된다. 1949년 당시 인구 962만 2천명이 0.0225%의 속도로 증가했다고 가정할 경우 1953년 북한인구는 1,051만 7천 646명이 된다. 1953년 인구가 849만 1천명이므로 전쟁으로 인해 출생율이 감소되

10)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 (Washington, D. C.: U. S. Bureau of the Census, 1990), p. 52.

지 않고 1949년의 인구증가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 1949년부터 1953년 기간동안에 202만 6천 646명이 감소된 셈이 된다. 다시 말하면, 지리적 이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동 기간동안 북한이 입은 인적 손실의 최대규모는 적어도 202만 6천 여명이 된다는 것이다.

〈표 2〉 한국전쟁 전후 북한의 인구변화

(단위: 천명)

연말인구	전 체	남 자	여 자
1946	9,257	4,629	4,628
1949	9,622	4,728	4,840
1953	8,491	3,982	4,509
1956	9,359	4,474	4,885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Washington, D.C.: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July 11, 1990), p. 52.

인적손실의 최대규모가 적어도 202만명이라고 한 이유는 만일 1949년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연사망인구가 모두 전쟁기간동안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그 규모는 훨씬 늘어나기 때문이다. 즉 1949년의 출산율(41.2)이 전쟁기간에도 동일하게 지속되었다면 1953년의 인구는 1,131만명이 될 것이고 1953년의 실제인구 849만명과는 282만명의 차이가 생긴다. 여기에서 자연사망자가 모두 전쟁기간에 죽었다고 가정하면 전쟁기간 동안 발생한 인명피해는 최대 282만명이 된다. 따라서 한국전쟁 기간동안 북한이 입은 인적 손실은 최소 113만명, 많게는 202만명, 최대 282만명까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쟁기간 중 실제 출산율은 1949년보다는 낮았을 것이다. 전쟁기간 중 실제 출산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전쟁기간 중의 실제 출산율이 1953년의 출산율과 같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자. 전쟁기간중인 1950년, 1951년, 1952년이 휴전상태에 들어간 1953년의 상황과 다를 수 있겠지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3년의 출산율은

1944년의 31.3, 1949년의 41.2, 1955년 40.5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로 전쟁기간 중의 실제 출산율과 근접할 것으로 생각된다. 1953년의 출산율 25.1을 1950년부터 3년간의 전쟁기간에 적용했을 경우 1953년에는 1,062만명이 된다. 자연사망자가 전쟁기간에 모두 죽었다고 가정하면 전쟁기간 중의 인적 손실은 213만명으로 계산된다. 사망률을 고려하면서 출산율을 적용하면 1953년의 인구는 989만명으로 전쟁기간 중 인적 손실은 140만명으로 추산된다.

〈표 3〉 한국전쟁 전후 인구증가율

연도	조출산율(CBR)	조사망율(CDR)	자연인구증가율	유아사망율
1944	31.3	20.8	10.5	204.0
1949	41.2	18.7	22.5	-
1953	25.1	18.1	7.0	-
1955	40.5	20.9	19.6	56.4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Washington, D.C.: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July 11, 1990), p. 69.

문제는 전쟁기간(1950~53) 동안 실제 출산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이다. 전쟁기간 동안의 출산율과 사망률을 알 수 있다면 인적 손실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1995년에 발표한 인구자료에 의하면 전쟁기간 동안인 1950~53년에 출생한 인구가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1950-53년에 출생한 인구 가운데 1993년 말 현재 생존한 인구는 1950년 출생자 149,183명, 1951년 출생자 145,761명, 1952년 출생자 180,550명, 1953년 출생자 213,468명 등 총 688,962명이다. 앞에서 최소 인적 손실을 113만명으로 잡은 것은 688,962명의 생존인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유아사망율이나 남북간의 인구이동과 같은 인구학적 인 변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한국 전쟁기간 동안의 인명손실은 113만 1천명

과 688,962명을 합한 181만 9천 962명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전쟁기간 동안 손실된 인적 규모는 적어도 182만명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표 4〉 한국전쟁기간 중 출생자

연령(출생년도)	전체	남자	여자
36세(1956)	352,542	173,750	178,792
37세(1955)	222,207	109,842	112,365
38세(1954)	246,715	120,100	125,615
39세(1953)	213,468	104,739	108,729
40세(1952)	180,550	87,811	92,739
41세(1951)	145,761	71,306	74,455
42세(1950)	149,183	72,103	77,080
43세(1949)	257,661	125,647	132,014
44세(1948)	257,632	125,442	132,190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일제 조사자료집」,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1 December 1993)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1995), p. 5.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쟁기간 동안의 실제 출생인구는 현재 생존해 있는 688,962명보다 분명히 많을 것이다. 만약 전쟁기간중 출생과 생존기회가 1953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1993년 생존인구가 213,468명인데 1953년의 실제 출산율은 25.1(전체인구 1천만명이라면 251,000명 출산)이므로 현존인구의 1.178배를 출산한 셈이다. 각 연도의 현존인구에 이 비율을 곱하면 전쟁기간 중 총 출생자는 약 122,635명이 된다. 즉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구와는 5만4천명 정도의 차이가 나며 이는 적어도 5만명 이상의 추가 출생자가 있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688,962명은 출생 후 40년 동안 생존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구를 근거로 사망률을 적용하여 전쟁당시의 출생률을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해보자. 전쟁기간의 유아사망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래의 <표 3>에서 처럼 전쟁전후의 유아사망률을 적용해 볼 수 있다. 1944년의 204.0명과 1955년의 56.4명인 상황을 고려하여 전쟁기간에 유아사망율을 100.0명으로 계산한다면 약 68,896명이 된다. 즉 최소한 이 숫자만큼의 인구는 전쟁기간 동안에 출생한 인구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또 유아기를 지나 현재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한 자연사망인구 가운데 일부도 전쟁기간 중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기대수명을 보면 1936-40년의 경우 38.4세, 1957년에는 57세였던 사실¹¹⁾로 미루어 보더라도 조사당시까지 사망자는 많을 것이다. 만약 1949년의 자연사망율을 적용하면 12,88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온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전쟁기간에 출생하여 사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기간 동안의 출생자 가운데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구규모를 근거로 추정할 때 유아사망자 68,896명과 자연사망자 일부를 합하면 7만명-8만명이 전쟁기간의 인적 손실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실제 출생자는 여기에 제시된 수치보다 많을 것이고 따라서 전쟁기간의 사망자도 이보다 많을 것이다. 그러나 8만명 정도를 전쟁기간의 손실인구로 보고 181만 9천 962명에 이 숫자를 더하면 한국전쟁기간 중 북한이 입은 인적 손실은 총 190만명이 된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지리적 인구이동 변수를 계산해야 한다. 즉 한국전쟁기간 중 북한이 입은 인적 손실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를 파악하려면 전쟁기간 중 남쪽으로 월남한 인구와 북쪽으로 월북한 인구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한다. 월남자와 월북자와의 차이만큼 북한은 지리적 인구이동으로 인적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추정한 인적 손실에서 인구이동으로 인한 손실을 제외하면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인적 손실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월남자 숫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월남자는 한국전쟁 이전 월남자와 전쟁기간중 월남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11)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Washington, D.C.: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July 11, 1990), p. 74.

전쟁기간중 월남자 규모이다. 일반적으로 이북 5도청은 남한에 살고 있는 월남자를 5백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이 경우 전쟁기간중의 월남자를 100만명으로 잡는다. 그러나 월남자 숫자에 대한 이 추산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학자들은 월남자 인구를 65만명¹²⁾ 정도로 추산한다.

한국 내무부는 1955년 '제1회 간이 총인구조사'에서 전쟁기간중 월남자의 숫자를 449,929명으로 발표하였다. 1960년 내무부 통계국이 조사한 「국세조사」에 의하면 북한출신(출생) 인구가 64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64만명 가운데는 전쟁이전 월남자도 포함되는 바, 1955년 실시한 조사에서 전쟁이전 월남자가 28만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쟁기간 중 월남자의 규모가 45만명 정도라는 것은 근거없는 수치는 아니다. 1990년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북한출신(출생) 인구, 즉 전쟁전 월남자와 전쟁중 월남자를 포함한 모든 북한출신 인구가 총 417,63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전쟁기간중의 월남자 숫자는 45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월남자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일단 월남자의 숫자를 공식적 통계자료인 449,929명으로 상정한다.

그런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인구가 이동한 것만이 아니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한 인구도 있다. 남북자와 월북자들이 그들이다. 남북자와 월북자 인구는 월남자 인구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월남자 숫자를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전쟁기간 중 남북자는 84,532명으로 추산되며, 월북자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30만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북자와 월북자를 구분하지 않고 북한으로 납치되었거나 넘어간 사람들의 규모를 통상 30만명으로 어림잡는다.¹³⁾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한 인구를 30만명으로 가정한다.

월남자로 인한 인적 손실을 월북자, 남북자로 상쇄하고 나면 남쪽에서의 인구이동으로 인해 손실된 인구는 15만명 가량 된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중국 등 해외로의 유출과 국내로의 유입으로 인한 인구변동을 고려해야 한

12) 전광희, “한국전쟁과 남북한 인구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사회변동」(서울: 풀빛, 1992), pp. 60~92.

13)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488; 김학준, 「한국전쟁」(서울: 박영사, 1989), p. 347.

다. 북한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 기간중 중국쪽으로 인구의 이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한국전쟁 기간에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인구가 오히려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평가된다.¹⁴⁾ 만약 중국에서 북한으로 인구가 유입되었다면 남북 인구가동으로 손실된 15만명이 더 줄어들게 되고 사망자 인구규모는 더 커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료의 불명확성 때문에 인구가동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190만명의 손실인구 중 이동인구 15만명을 제외하면 175만명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당시 북한인구의 18%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북한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적 손실 규모에 대해 밝히기를 꺼려해 왔다. 북한이 전쟁의 피해자 규모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은 것은 북한의 전승신화에 손상이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 싶다. 만약 이러한 엄청난 인적 피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한국전쟁에 대한 인적 피해규모를 밝히는 대신 일부지역에서 자행된 '미제의 학살만행'의 통계를 제시하며 미제국주의의 비인간적인 측면과 범죄적 행위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미군이 북한지역에 진군한 후 50여일 동안 총 172,000여명의 인민을 학살했다고 한다.¹⁵⁾ 「조선전사」에서는 객관적인 피해규모 자체를 규명하기보다는 피해의 질적인 측면을 폭로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미제국주의의 잔인성을 각인시키고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1999년 9월 이후 노근리사건이 불거지면서 미군에 대한 피해보상 논의가 제기되자 북한은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미군의 만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그 동안 감추어 왔던 전쟁의 피해규모를 밝힌 것이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전쟁 시기 북한지역에서 190만명의 주민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¹⁶⁾ 북한이 지금까지 미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해 진상을

14) 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p. 36.

1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26」(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 129~130.

폭로해 왔으나 전쟁의 인적 손실규모를 190만명이라고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이 어떤 의도에서 제기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위에서 추정한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규모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 볼 만 하다.

북한의 인적 손실은 남한과 비교할 때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피해규모에 대한 평가도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사망자와 실종자가 군인 278,000명, 민간인 574,000명(월북자포함)으로 총 85만 2천명이며, 부상자는 군인 709,000명, 민간인 229,625명으로 총 111만 5천명이다.¹⁷⁾ 사망자와 실종자 등 직접적인 인적 손실은 85만명이며 넓게 보는 사람들도 100만명 정도로 평가한다. 당시 남한의 인구가 2천만명이었으니 전쟁으로 인한 인적 손실은 전체인구의 5%에 해당한다. 북한이 입은 인적 손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다. 인구수를 감안한 인적 손실의 충격은 남한보다 북한이 3-4배 컸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III. 인적 손실에 따른 계급정책의 질적 변화

사회주의는 계급정책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사회주의 체제는 혁명 이후 국가건설과정에서 엄격한 계급정책을 실시하였다. 즉 혁명과정과 국가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력들에게 사회적 혜택을 배분하는 정책을 견지한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과정에 참여하여 구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노동자와 군인, 지식인, 농민 등 다양한 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특히 혁명의 주도세력에 대해서는 특혜가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지주와 자본가 등 구 자본주의 체제의 특권계층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반동분자로 간주되어 사회적 차별이 가해지며 노동자와 농민, 군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린다. 사회주의 혁명이념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확고히 견지하며 노동계급의 입장을 강화한다. 또한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반동세력

16) 「평양방송」, 1999.12.21; 「연합뉴스」(북한소식), 1999.12.23.

17) 유완식·김태서, 「북한 30년사」, pp. 137-138;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480.

을 진압함으로써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이념적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소위 당성·혁명성·계급성 등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계급을 분류, 지속적인 계급투쟁을 수행하는 통치전략을 시도한다.

북한은 해방직후인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반제·반봉건 민주혁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자를 핵심으로 농민, 애국적 지식인, 양심적 민족자본가들이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세력을 조직화하였다. 사회주의 계급노선에 의해 계급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계급정책을 “노동계급의 당이 계급노선에 기초하여 여러 계급과 계층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책”라고 정의한다.¹⁸⁾ 김일성은 “사람들을 언제나 계급적 견지에서 평가하며 당의 계급노선에 철저히 서서 원수와 우리편을 엄격히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¹⁹⁾라며 계급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북한은 노동계급을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적 주력으로 규정하고 농민이나 인테리, 중산계층을 혁명에 끌어 들여 이끌고 나가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계급노선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질적인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급성 이외에 전쟁의 피해 상황을 기준으로 한 성분구분이 첨가된 것이다. 한국전쟁은 위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북한에 엄청난 인적 손실을 가져오면서 북한의 가족구조와 사회구조에 지각변동을 초래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인명의 대량손실로 가족구조와 사회구조가 파괴됨으로써 사회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전쟁이 국가발전과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브루스 포터 (Bruce D. Porter)에 의해 잘 지적되고 있다.²⁰⁾ 즉 전쟁은 사회의 조직을 생성하기도 하고 해체시키기도 하며 재구성하기도 한다. 전쟁은 중앙집권화와 관료주의, 조세확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정부조직이 성장하는 계기를 가져오며,

1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1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p. 779~780.

19)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1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166.

20) Bruce D. Porter, *War and the Rise of the State: The Military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s* (New York: The Free Press, 1994), pp. 11~20.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지도력이 공고화된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전쟁을 통해 국가조직과 재정이 파괴되고 그 후유증으로 혁명이 발생하는 등 사회해체의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전쟁의 경험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사회화되며 국가는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사회통합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전쟁의 사회적 재구성 효과 (Reformative effect)는 계급장벽을 무너뜨리며 사회 평준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사회개혁의 동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직접적인 인적 손실은 전체인구의 17~18%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였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상자에 대한 처우도 중요한 문제였다. 한국전쟁의 사망자가 많았던 만큼 민간인 부상자도 매우 많았다. 앞에서 언급한 「통일조선신문」은 부상군인 22만 6천명 이외에 민간인 159만 4천명이 부상당함으로써 182만명의 부상자가 생겨났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다.²¹⁾ 부상자 규모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상자에 대해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하면 북한인구의 약 35%인 350만명이나 된다. 인구의 3분의 1이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을 포함한다면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에는 심각한 규모의 결손가족이 발생했으며, 적어도 북한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결손가족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본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과 계급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전쟁의 피해자가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전사자·피살자 가족을 사회의 핵심세력으로 등용시키면서 계층구조를 재정비하였다. 북한은 1958년 8월 사회주의적 제도개혁을 완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21) Toitsu Chosen Shimbun, June 27, 1970; Young Whan Kihl,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Regimes in Contest*.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4), p. 42에서 재인용.

위한 새로운 전환을 목표로 그 해 12월부터 전체주민을 출신성분별로 구분하는 ‘중앙당집중지도사업’을 추진했다. 1966년 4월~1967년 3월에 실시한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1970년 6월에 걸쳐 조사한 소위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그리고 1980년 4월~10월에 걸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 1981년 1월~4월에 걸친 ‘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²²⁾ 이는 전 주민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등을 기준으로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소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북한이 시도한 사회주의적 계급정책이었다. 북한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전쟁가담 정도와 성격, 피해자, 월남자 등 구체적인 성분분류 작업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혁명가 가족 이외에 체제의 핵심군중으로 등용할 전사자·피살자 가족을 파악하고 체제반동분자로서의 월남자가족을 분류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성분을 “사회계급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람들의 사회적 구분, 곧 사람들의 사상상 구성성분으로서 어떤 계급의 사상상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떤 계급의 사상이 그의 머리속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출신과 직업, 사회생활의 경위에 의하여 사회성원을 사회적 부류로 나눈 것”²³⁾이라고 정의한다. 북한은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민성분을 크게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나누어 평가한다.²⁴⁾ 출신성분은 “태어날 때 가정이 처한 사회계급적 관계에 따라서 구분되는 성분”²⁵⁾ 즉, 본인이 출생할 당시 부모의 성분을 의미한다. 사회성분이란 “본인이 직접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업 및 사회계급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성분”²⁶⁾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신분구분을 가리킨다.

이러한 성분정책에 의해 북한의 전주민은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 등 3계층으로 구분된다. 일제시대와 해방후, 한국전쟁기, 현재 등의 시기

22) 통일부, 「2000 북한개요」(서울: 통일부, 1999), p. 419.

23)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제1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762.

24) 현성일, “북한 인사제도 연구,”(미발표 논문), p. 6.

25)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제2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597.

26)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제1권, p. 1646.

에 정치사회적 지위와 역할, 정치적 동향과 반동단체 가담여부, 출신 및 사회성분을 종합평가하여 핵심집단인 핵심군중, 중간계층은 기본군중, 반동계층인 복잡군중 등 세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귀순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북한은 주민을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으로 이분하고 핵심군중을 기본군중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²⁷⁾ 이러한 판단은 북한이 196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주민들을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으로 구분하고, 기본군중은 다시 핵심군중과 기본군중으로, 복잡군중은 계급적 토대, 한국전쟁관계, 전직관계, 사회도덕면 등으로 다시 분류하여 그에 대한처리원칙과 기준을 작성하였다.²⁸⁾ 공식적 구분이 어떻게 간에 정치적 위계구조상 항일혁명열사는 최상류층을 형성하고 핵심군중은 상류층, 기본군중은 중류층, 복잡군중은 하류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성분집단은 출신과 성장배경, 경력 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사상과 동향을 분류해 놓은 사회적 신분(status)으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불평등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상류층을 대변하는 핵심군중은 북한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통치계급으로서 북한사회의 핵심부류에 속하는 특수계층이다. 핵심군중은 최고지도층과 일반핵심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고지도층은 ① 김부자의 가족과 친척, '접견자' 및 연고자들, ② 항일빨치산 참가자(항일투사)와 그 가족 및 해방전후 김일성빨치산이나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했다 사망한 소위 혁명가 유가족, ③ 남파간첩 등 대남공작원들과 '남조선혁명가' 유가족 및 자녀들을 포함한다. 최고지도층은 양적 규모로 보면 크지 않은 집단이다. 현재 북한을 지배하는 당조직의 주요 간부, 각 기업소 지배인, 지방 고급공무원 등 최고위층은 약 1만~2만여명으로 추산되며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4만~8만명, 방계가족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20만명 정도 된다.²⁹⁾

27) 귀순자 김정민과의 인터뷰(98.3.4) 및 현성일, "북한의 인사제도 연구," pp. 3~4.

28) 북한연구소, "북한의 계급정책,"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 1」(서울: 한울, 1987), p. 331~333.

29) 1993년 현재 13,000여명의 당·정·군, 각급 기업소 및 사회단체의 주요인사 명단이 파악되고 있는 바, 최고위층은 1~2만명선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특수계층의 골간을 이루는 항일혁명가가족도 북한에 상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숫자에 있어서는 1% 정도로 그리 많지 않다.³⁰⁾ 따라서 북한의 최고위층을 형성하는 특수계층은 전체인구의 약 1~2% 정도로 추산³¹⁾되며 북한의 기득권내 핵심층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상류층의 주류는 일반핵심계층이 차지한다. 일반핵심계층은 고농(머슴), 영예군인, 비서국비준 순국가족 등의 일부가 포함되지만 한국전쟁 당시 피살자, 학살자 및 전사자 가족이 중심을 이룬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발생한 170~18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전사자 혹은 피살자들과 그 가족이 이 부류에 속한다. 북한의 중하급 간부들인 일반핵심계층은 전체인구의 28-29%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전쟁의 전사자·피살자 가족은 일반핵심계층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북한은 성분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혁명가와 전사자·피살자 유자녀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사회적 혜택을 제공했다. 북한은 1951년 1월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인민군장병 및 빨찌산들과애국렬사들의 유자녀학원설치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애국렬사, 인민군장병 및 유격대원들의 유자녀들을 국가적 부담으로 보육 또는 교육하도록 하였으며 각 도소재지와 주요 도시에 유자녀보육원과 유자녀학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³²⁾ 소위 ‘전재고아’들을 위한 초등학교를 여러 곳에 설치하였으며, 만경대 혁명유자녀 학원, 강반석 혁명유자녀학원, 해주혁명유자녀학원, 남포혁명유자녀학원 등 각 도별로 혁명유자녀학원을 설립하고 이들을 사회주의 제도에 흡수하였다.

이렇게 성장한 유자녀들은 북한사회에서 ‘직업적 혁명가’로 등용된다. 김일성은 혁명학원을 졸업한 유자녀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대학교육기관의 설립을 지시하는 한편, 중앙당과 지방당에 유자녀과를 신설하여 이들을 직업혁명가로 양성하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였다.³³⁾ 이러한 유자녀

30) 귀순자 이순옥씨의 증언(199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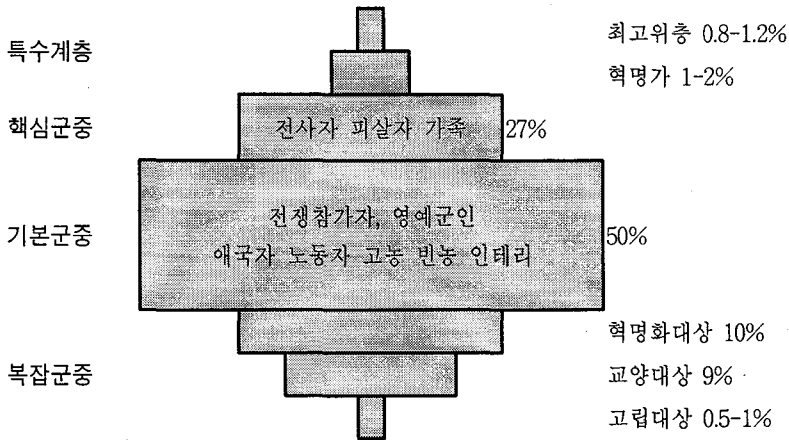
31) 귀순자 김정민씨와의 인터뷰(1998.3.4).

3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84.

33) 김일성, “혁명가유자녀들을 직업적 혁명가로 키우자,” 『김일성저작집』 제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393~407.

직업혁명이 양성정책은 노동계급출신 간부들의 이론수준이 낮은데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³⁴⁾, 나아가 인민대중이 주체가 되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북한식 군중노선에도 합치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유자녀들과 같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사회주의 체제와 당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만경대혁명학원 졸업생들은 “인민군대의 중요한 초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맡겨진 혁명무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등 군대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된다.³⁵⁾ 전통적 가족관계의 해체와 결손가족의 증가는 국가에 의한 책임의 증대로 이어졌고 ‘전주민의 노동자화’라는 이데올로기적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사회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하였다.

〈그림 1〉 북한의 성분별 계층구조



중류층인 기본군중은 특수계층에 속하지 않는 일반노동자, 농민, 사무원

34) 김일성, “혁명가유자녀들을 직업적혁명가로 키우자,” 「김일성저작집」 제22권, p. 404.

35) 김일성, “축하문,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김일성저작집」 제3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473. “원래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은 군사간부로 키우고 해주혁명학원과 남포혁명학원 학생들은 당정치일군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김일성, “혁명가유자녀들을 직업적혁명가로 키우자,” 「김일성저작집」 제22권, p. 395.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북한은 기본군중을 “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군중”이라고 규정하고 노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를 기본군중으로 포함한다.³⁶⁾ 그러나 북한이 기본계급이라고 할 때는 혁명의 주력군을 이루는 세력, 즉 노동계급과 농민을 가리킨다.³⁷⁾ 기본군중은 구체적으로 ① 해방전 지주와 자본가로부터 착취를 당했던 애국자와 노동자, 고농 및 빈농, ② 한국전쟁 참가자와 영예군인, ③ 해방후 북한체제 발전에 적극 협력한 인테리와 열성분자 등이 기본군중에 포함된다. 기본군중은 전체인구의 50%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준비과정을 거쳐 핵심간부로 동용되는가 하면 일부는 복잡군중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군중 가운데는 영예군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부상자가 전체인구의 18%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정책 추진이 필요했다. 북한은 전쟁 부상자들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북한은 1951년 4월 “조국해방전쟁에서 불구자로 된 인민군장병 및 빨찌산들을 위한 영예군인학교 설치에 관하여”를 채택하고, 각 지방에 국가부담으로 영예군인들을 위한 영예군인공업학교, 영예군인농업학교, 영예군인통계부기학교 등을 설치하였다.³⁸⁾ 또한 전국 각 시·군별로 영예군인공장이라는 독립공장을 건설하여 영예군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북한의 시·군 각 지역에 상이군인들이 운영하는 영예군인공장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조직·운영되고 있다. 시·군에 적어도 1개 이상씩, 많게는 3-4개의 영예군인공장이 있다. 현재는 영예군인이 자연사로 인원이 줄어들어 영예군인 당사자 이외에 보호자까지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각 지역에 화학일용품, 수지일용품, 철제일용품 등 일용품과 학용품, 악기, 가방, 제약, 편직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영예군인공장이 있음을 볼 때, 한국전쟁으로 생겨난 부상자가 얼마나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하류층인 복잡군중은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서 사

36) 과학·력사사전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용어사전」(평양: 과학·력사사전출판사, 1982), p. 119.

37) 과학·력사사전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용어사전」, p. 118.

38)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85.

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이다. 복잡군중은 ① 해방전 지주, 자본가, 친일파, 한국전당시 북한을 반대한 세력, 친남한세력, 월남자가족, 반당 종파분자(김부자와 노동당을 비난하거나 반대한 가족), ②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도전한 가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저촉되어 문제시된 가족, 북한체제를 비방한 자의 가족, 남한방송 청취자 가족, 남한을 숭배하는 가족, 종교인 가족, 악질 고리대금업자, 당정책을 반대한 자, ③ 반당종파분자의 동조자(피동자), 병역기피자, 한국전당시 치안대 가담자, 월남기도자, 국가 및 군사 비밀 누설자, 출당철직 및 추방자(면책 및 면직), 사회경제범출소자, 타락 방탕한자 등이거나 이들의 영향을 받는 직계가족으로 분류된다.

복잡군중 가운데는 월남자가족이 다수를 차지한다. 월남자는 한국전쟁 이전 월남자와 한국전쟁 기간중 월남자로 구분된다. 지주, 자본가, 종교인 등 전쟁이전 월남자도 적대분자들이지만 전쟁중 월남자는 주민들이 전쟁으로 고생하던 시기에 “사회주의 조국을 버리고 떠난 반혁명분자” 혹은 ‘반동분자’들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엄중한 차별을 받았다. 전쟁이전의 월남자는 적계는 28만명, 광계는 350만명까지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적계 잡아 28만명으로 보면 북한에 남은 가족은 100만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전쟁중 월남자의 규모는 적계는 45만명, 광계는 100만명이라고 하지만 앞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45만명으로 보았을 경우 가족을 포함하면 200만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또 8만 4천명의 납북자 가족과 월북자 가족의 상당수가 복잡군중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복잡군중 가운데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는 인적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세대교체 및 1세대들의 사망, 정치범들의 강제격리 등에 의해 정치적 우려가 없는 대상들을 소위 “포섭한다”는 정책에 의해 복잡군중에서 기본군중으로 격상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전쟁직후에는 복잡군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30여년간에 세대변화와 정책변화에 따라 복잡군중은 감소한 반면 그만큼 기본계층은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에 복잡계층으로 분류되었던 자들이 부모세대로 성장하면서 그동안 자리잡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아 그들의 자녀세대는 기본계층으로 전반적인 상향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복잡군중은 전체인구의 20%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월남자가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90년대 들어서는 “기본균등 뿐만 아니라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균등도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보고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는”³⁹⁾ 광폭정치, 인덕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 1998년 3월에는 ‘주소안내소’를 설치하여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상봉 추진을 천명하였다. 이는 전쟁으로 형성된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성분구조를 탈피하려는 김정일의 포용적 계급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평양방송」이 시사논단 논평을 통해 월남자들을 “우리사회주의 제도에 대해 악의를 품고 남으로 달아난 악질 반동분자들”이라고 표현⁴⁰⁾하고 있으며, 현재도 초급당비서, 부비서, 세포비서 등이 분기별로 성분심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광폭정치 슬로건과는 달리 기층민중 사이에서는 차별적 성분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분정책에 의한 불평등의 요소가 과거에 비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북한의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중추적 요인임엔 틀림없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한국전쟁으로부터 심각한 인적 자원을 상실함으로써 경제전략과 사회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성분조사사업과 성분정책의 적용으로 북한은 혁명초기에 추구하였던 사회주의 계급정책은 완화·변질되었다. 혁명의 중심세력을 노동자농민·인테리 등 계급적 특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과 관련한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핵심세력을 평가하는 성분이라는 자원을 정치적 위계질서를 구축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였다. 결국 북한 계급정책은 한국전쟁의 막대한 피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사회주의적 계급노선으로부터 한국전쟁의 피해를 기준으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성분위주의 계층구조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IV. 남북화해와 민족공동체 형성에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계층구조에서 중산층 이상은 한국전

39) 「로동신문」, 1993. 1. 28.

40) 「연합뉴스」, 1999.8.2.

쟁의 피해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류층은 한국전쟁의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막연하게 사상교육이나 세뇌교육을 통해 한국전쟁의 처절함을 학습한 것이 아니라 북한식 보훈정책에 의해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득권 세력이다. 이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며 가족관계를 통해 체험적으로 적대의식을 터득한 그 후손들이다. 이들은 소외된 주변인으로서가 아닌 사회의 상층 기득권세력으로 집단과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사회구조는 남북화해와 민족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남한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북한에 대한 적대감정이 주로 국가와 학교의 이데올로기 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 형성되어 있으며, 전쟁피해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사회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피해자들이나 월남자들에 대해 사회의 주요 집단이나 계층을 형성하도록 배려한 북한과는 달리 재정적 보상 정도의 국가보훈정책을 추진하였다. 남한에서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체인구의 5% 정도에 불과하고 전쟁피해 가족들을 사회의 핵심세력으로 재편하려는 사회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강렬한 것을 보면, 전쟁피해가족들을 계급정책으로 구조화한 북한의 대남적개심은 대단하리라 예상된다.

남북한간에 자리 잡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불안의식과 이질감의 근원은 한국전쟁에서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간의 문화충격과 사회적 이질성으로부터 오는 냉소주의적 태도가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적 요소들이 한국전쟁과 같은 사회문제와 맞물려 터져 나온다면 더욱 첨예한 갈등으로 치달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많은 인적 피해를 입었고 전쟁피해의 적대감정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북한의 현실을 상기한다면 통일과정에서 한국전쟁의 문제는 어느 순간에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임은 불문가지이다.

북한사회의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양체제의 적대의식을 해소하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전쟁의 피해정도에 따라 서열지워진 북한

사회구조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한국전쟁문제를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한국전쟁의 책임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당위론적 주장은 이러한 면에서 위험한 선택이다. 이 당위론적 선택은 남북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

분단 55년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열망하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한 상호간에 한국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가족들이 지금 어떤 사회적 환경에 처해있는지를 진지하게 이해해야 한다. 한국전쟁으로 받은 피해와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남북한은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한국전쟁으로 내면화되고 구조화된 피해의식과 적대의식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남북한 민족공동체 형성이나 사회통합은 한 걸음도 진전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원인, 피해사태에 대한 책임추궁과 같은 문제는 역사적 과제로 미루고, 가급적이면 전쟁의 피해상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쟁의 상처로 깊게 패인 서로의 적대감정을 해소함으로써 남북이 진정으로 화해하는 일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작업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다.